

## Online Series

2015. 7. 21. | CO 15-19

이란 핵 타결 이후  
북핵 전망

차두현 초청연구위원

7월 1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이란과 주요 6개국(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 + 독일) 간 핵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2002년 이후 13년을 끌었던 이란 핵개발 문제는 이제 해결 국면으로 진입했다. 협상 기한인 6월 30일을 2주나 넘긴 진통이 있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에서의 관련 결의안 통과와 해당국들의 국내 승인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최소한 이란의 비핵화와 국제적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의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이란간의 관계 역시 오랜 대립과 불신을 넘어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2년 조시 부시 당시 대통령의 국정연설(state of union address)에서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명명 되었으며 공히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세 체제, 즉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의 행로 역시 이란 핵 협상의 타결로 극적으로 나뉘게 되었다.<sup>1)</sup> 한 국가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1) 2001년 말 미 의회에 보고된 2002년 ‘핵 태세 검토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2002, NPR 2002)’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은 모두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체제라는 지목을 받았다. 후세인 정권이 붕괴한 2003년 이후 미 국방/안보 관련 문서에서 북한과 이란은 국제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자로 항상 같이 분류되었다. 이러한 시각은 NPR 2010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David S. McDonough, “The 2002 Nuclear Posture Review: The New ‘Triad’, Counterproliferation, and U.S. Grand Strategy,” Liu Institute for Global Issues Working Paper

직면하여 기존의 정권·체제가 붕괴하였으며(2003, 이라크), 다른 한 국가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갈등관계를 타개할 계기를 마련하였다(2015, 이란). 북한만이 평화적 해결도 극단적 갈등도 유보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기에 이란 핵 협상의 타결은 자연히 다음과 같은 물음을 우리에게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미북 관계는 결국 이란과 이라크 두 사례 중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둘 다가 아니라면 과연 북한의 제3사례는 어떠한 형태로 귀결될까?

###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

주요 6개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안은 유엔 안보리가 7월 20일(현지시각) 기존의 對 이란 제재 결의안 해제를 골자로 하는(물론, 유예기간이 있다)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적 추인을 받았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과 이란의 국내 절차이다. 미국과 이란 국내에서 모두 승인이 끝나면 협상안은 이제 실질적 약속이행의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만약 어느 한 쪽의 국내 승인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란 핵 타결 국면은 다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리 크지 않다. 이란 의회가 이미 금년 6월 최종 타결된 협상안의 승인 권한을 이란 국가안보최고회의(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로 이관했다는 것은 협상안이 타결될 경우 이란 내부적 절차는 큰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었다.<sup>2)</sup> 그렇다면 남은 최대 변수는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미 의회이다. 그동안 공화당 인사들이 對 이란 핵 협상의 신뢰성에 의문을 표하고 반대의사를 공공연히 천명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협상 비준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3)</sup>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일단 협상안이 성공적인 행로를 간다는 가정 하에 북한

No. 38(August 2003); U.S. DoD, Nuclear Postur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U.S. DoD, 2010)를 참조할 것.

2) 이란 국가안보회의는 이번 협상의 이란 측 최고 당사자인 로하니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물론,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협상안 타결 자체가 하메네이와 로하니 간의 교감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협상 비준의 거부는 이란 핵개발 국면의 재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상호불신으로 인해 더욱 거칠어질 것이다. 이 경우, 미국은 군사력 사용까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ISIS 격퇴 작전 등의 군사력 소모를 고려하면 미국의 대응 능력은 현저하게 제한된다. 자칫 공화당으로서는 공연히 일을 키웠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당은 협상안에 대한 비판의견을 통해 미국 국내의 親 이스라엘 여론을 진정시키고, 오바마 행정부의 유화적 대외정책에 대한 공박 근거를 마련하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는 선에서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 내의 협상안 반대 여론을 자극하여 승인을 어렵게 만드는 효과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나, 이미 말한 대로 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핵 문제에 대한 영향을 전망해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 그리고 타결된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현직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이란과 북한의 사례는 많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2013년 11월, 이란과 핵 협상에 임하기전 존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줄곧 NPT 회원국이었고, (본격 핵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으며, 특정시설에 대한 상시 사찰을 받아들이고, 사찰이 진행 중인 시설에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공약했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다르다(Iran isn't North Korea)”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부인해 온 이란의 입장과 이미 핵실험을 했고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북한과는 외교적 해결에 있어 접근방법이 틀리다는 것이다.<sup>4)</sup> 미 국무부의 마리 하프(Marie Harf) 대변인 역시 북한과 이란 케이스는 “분명히 다른 이슈라고 생각한다(I think that these really are very different issues)”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sup>5)</sup> 국내 분석가들 역시 이미 핵 능력이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북한의 경우에 이번 핵 협상 교훈을 그대로 대입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는 북한까지도 자신들은 이란의 경우와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 방송에 따르면 이란 핵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금년 4월,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 주재 북한 관리가 북한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 관심이 없으며 “북한이 먼저 핵을 내려놓는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것”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sup>6)</sup>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차례나 핵실험을 했으며, 이미 수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사례와 핵 개발 수준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이란의 사례는 분명 핵 능력 면에서 차이가 난다.<sup>7)</sup>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제재로 인해 주 수입원인 석유수출이 차단되고

4) 사실, 케리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Well, there are many reasons why it's not. First of all, it's a member of the NPT. Secondly, they have engaged in a negotiation. Thirdly, they have committed to have daily inspections of certain facilities. They have committed to restrict their activities with those inspections taking place...And in addition to that, they have publicly committed that they are not going to build a nuclear weapon. North Korea already has and has tested and will not declare a policy of denuclearization. So, there are many different things that lead one to at least say that we ought to be exploring and testing the possibility of a diplomatic solution.” 이에 대해서는 당시 CNN 인터뷰의 비디오 클립을 참조 <<http://edition.cnn.com/videos/politics/2013/11/24/sotu-kerry-intv-iran-nuclear-deal.cnn>>.

5) 이 언급은 금년 4월 언론브리핑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www.state.gov/r/pa/prs/dpb/2015/04/240324.htm>>.

6) 이에 대해서는 *Voice of America*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2701740.html>> 참조.

7) 어떤 면에서는 자체 핵개발 과정에서 부딪친 중요한 기술적인 문제가 이란으로 하여금 기억 없는 핵

해외 금융거래가 제한됨으로써 실제 상당한 타격을 감수해야 했던 이란의 경험 역시 네 차례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sup>8)</sup>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어차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온라인 시리즈 CO 15-16 참조), 이라크식의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이란 핵 협상 교훈을 반영한 미국의 접근전략 전망

그렇다면 해체하려는 핵능력과 협상 여건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란 핵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교훈은 향후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에도 그대로 원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은 북한에 대한 비확산/비핵화 정책에 있어서도 최소한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파급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 비확산 체제의 절연벽(insulation wall)을 마련하였다. 1990년대부터 지속된 북한의 핵개발이 촉발한 여타 국가에의 핵확산 추세를 막는 데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 이외의 비핵국가 중에서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에게는 이번 이란 핵 협상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핵 보유는 북한과 같은 극히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감수해야 할 바가 너무 많으며, 결국 기술적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핵 문턱(threshold)을 이미 밟고 있는 행위자(북한)를 쫓겨두고, 여전히 문턱에 접근하지 못한 선두주자(이란)를 좌절시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 인해 북한은 기존 7개 핵보유국과 비핵국 사이의 이중 절연벽에 고립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둘째, 중동 지역에서의 정세 안정화를 바탕으로 한 대북 관리 여력이 증대되었다. ISIS와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관계 회복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한숨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스라엘의 태도가 변수이고, 이란이 친미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란의 중동 내 영향력을 일부 수용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란은 ISIS의

개발에 매달리기보다는 제재해제를 통한 실익을 추구하도록 만든 주요한 동기일 수도 있다.

8) 바로 이러한 점이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최대 맞상대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ISIS와의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 부패한 이라크 정부나 내전에 시달리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보다는 이란의 효용성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중동에서의 군사력 사용에 숨통이 트일 경우,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에 훨씬 유리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칸 네트워크(Khan Network)’의 붕괴를 유도했다. 시리아-이란-파키스탄-북한을 잇는 이른바 ‘칸 네트워크’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sup>9)</sup> 즉, 북한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 교류를 할 국가들의 연계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이란이 이 네트워크에서 빠지면(핵 합의를 이행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지리적으로 고립되었으며 내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역시 이탈하게 될 것이다. 파키스탄 정도가 남기는 하지만, 국제적 시선이 있는 가운데 파키스탄도 협력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넷째,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것이 더욱 어렵도록 만들었다. ‘칸 네트워크’의 붕괴는 이제 핵 문제에서도 북한이 완전히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다른 국가들과 기술 및 무기체계를 상호 교류함이 없이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을 유지할 경우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은 IAEA의 사찰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고 일반 경제 재재에 대해서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이란에 대한 무기수출 조치의 해제도 북한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이 금수 조치가 해제될 경우 이란은 제재 해제로 인해 생긴 재원을 활용해 더 신뢰성이 큰 러시아제나 중국제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잠재적 고객과 자금원 하나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에게 묵시적 압력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번 핵 협상 타결은 이란과

9) ‘칸 네트워크’는 파키스탄 핵개발의 공신으로 꼽히는 Abdul Qadeer Khan 박사의 이름을 딴 것으로,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위의 네 행위자를 묶는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무기의 상호교류 및 수출입체계를 의미한다. ‘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David Sanger, “The Khan Network,”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South Asia and the Nuclear Future organized by Stanfo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June 2004); IISS, *Nuclear Black Markets: A.Q. Khan and the Rise of Proliferation Networks - A Net Assessment* (London: IISS, 2007) 참조.



같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와 성의를 보일 때만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핵 협상의 타결로 인해 확보된 외교적·군사적 여력을 바탕으로 미국은 향후에도 북한과의 조기 대화를 추진하기보다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핵 협상의 최종 타결 이전에도 이미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핵 협상 과정이 북한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피력한 바 있다. 케리 장관은 2015년 5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 “이란 핵 협상이 북한에게도 자극제가 되거나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That agreement would indeed have some impact or have a positive influence)”고 언급한 바 있다.<sup>10)</sup> 전반적인 정황, 즉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냉담한 태도로 전환한 2013년 하반기 이후, 특히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2014년 하반기 이래의 여건을 감안할 때, 설사 협상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7월 1일 오바마 대통령이 공식 발표한 쿠바와의 국교 회복 작업을 가속화해야 하고, ISIS의 격퇴 작전을 계속 수행해야 하며, IAEA 사찰 등 이란 핵 문제에 대해 남은 변수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 즉, 단기적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은 북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으며, 중기적 시점에서 여력이 생긴다고 해도 확실하게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먼저 양보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일단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국제적인 비확산체제 와해의 급한 불은 꺼졌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먼저 북한의 핵기술이나 무기체계가 외부로 유출되는 비확산(이는 ‘칸 네트워크’의 와해로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에 먼저 중점을 두고 북한 핵위협을 ‘관리’하는 데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즉, 비확산의 벽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을 더욱 고립시킨 후, 자연스럽게 비핵화 약속을 얻어내거나 결과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는(체제 난국 등으로 인한) 국면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기존의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금융제재의 확대 등을 모색할 수도 있다.

10) 이에 대해서는 AP, “Kerry: Iran nuclear deal could be lesson for North Korea,” May 16, 2015 참조.

아직 이에 대한 고려가 본격화되지는 않은 듯하지만,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있어 또 다른 차원의 교훈을 미국에 줄 수도 있다. 2002년 부시 행정부가 이란과 이라크 그리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표현한 이후 이들에 대한 표현은 2005년 ‘폭정의 전초기지 (Outposts of Tyranny)’로까지 확대되었다.<sup>11)</sup> 북한과 이란의 비이성적 행태의 근원을 단순한 외교적 정책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까지 지목하고 나온 것이다. 실제로, 이 발언 이후 부시 행정부가 북한 등에 대해 정권 변환(regime transformation)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도 대두가 된 바 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란 핵 협상이 2013년 9월 오바마와 로하니간의 역사적 전화통화 이후 추진되었다는 점이다.<sup>12)</sup>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기존의 ‘폭정의 전초기지’ 중 하나가 스스로 변환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체제도 중기적 관점에서는 붕괴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한 금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역시 온라인 시리즈 CO15-16편을 참조)이 주목을 끌 수밖에 없다. 만약, 미국이 향후 북한 핵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경우 그 전제조건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변환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평양, 변화인가 폭주인가?

물론,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그 점에서야말로 분명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고 이야기 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sup>13)</sup> 1994년 제네바 미북 합의가 체결될 당시 북한의 핵 개발 문제를 저지하거나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히 시간이 있었다. 이는 미-이란 간의 핵 협상 개시 시점과도 상당부분 유사한 것이다. 반면, 지금의 북한과 1994년의 북한은 협상 여건 면에서 천양지차가 있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를 간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미-이란 핵 협상의

11) 이 표현은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의 상원 외교위원회 연설에서 등장한 것이다. 물론, 북한과 이란만을 지목한 것은 아니고(이라크는 전쟁 후 체제전환 기간이었다), 짐바브웨, 미얀마, 쿠바 등을 아우른 것이었다. 물론, 이 개념을 오바마 행정부가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접근은 사실상 부시행정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2) 그 한 달 전 이란은 아흐마디네자드 대변되던 보수강경 기조의 정부에서 하산 로하니 정부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물론, 아흐마디네자드 정부 이전의 이란 정부 역시 상대적으로는 덜 강경한 대외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신정(神政) 정치적 특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제약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란 국민의 변화 열망을 반영한 로하니 정부의 탄생은 오바마 행정부에게는 분명 고무적이었을 것이다.

13) 사실, 같은 ‘폭정의 전초기지’라고는 하더라도 이미 선거와 경쟁에 의한 지도자 선출방식을 가진 이란의 경우와 수령제 독재에 매달리는 북한의 경우는 천양지차가 있었다.

후속 조치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미국 역시 국제적 비확산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목표에 입각하여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과거보다 더 큰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이 바라는 바는 이란 핵 협상 타결의 사례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이 얼마나 비용(제재까지를 포함한) 대 효과 면에서 어리석은 일인가를 자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하거나 양보적인 조치를 보이는 것은 자제하지만, 북한 스스로 정책적 변화(정권의 변환이라면 더 바람직하고)를 선택하여 비핵화의 길을 선언함으로써 자연스럽게 ‘6자 회담’이라는 협상 테이블이 부활되는 방안이다. 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란의 불충분한 핵 능력이 오히려 굴욕적 타협에 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김정운의 금년 육성 신년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 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오히려 북한은 핵실험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한 이란보다 자신들의 몸값이 더욱 높다는 착시(錯視) 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

이란의 경우에는 협상의 장이 마련되는 데 그리 복잡한 거래 공식이 성립할 필요가 없었다. 석유수출의 차단 등을 비롯한 경제제재에 이란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비핵화의 반대급부로 경제제재의 해제만이 약속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네 차례의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현재까지는 이로 인한 체감(體感) 위기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북한이 협상 복귀의 조건으로 2005년의 ‘9·19 공동성명’ 혹은 우선 2012년의 ‘2·29 합의’에 입각한 대북 수혜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할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북한에 대해 깊은 불신감과 실망감을 표현해 온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 이란 핵 협상의 타결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은 미국과 북한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평양은 변화와 폭주의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란 핵 협상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의 여부는 2~3개월 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미국이 바라는 바대로 이란 핵 협상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다시 한 번 미국에 대하여 대화 제스처를 취할 것이고, 그 시발은 핵실험 유예나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화에 응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북한의 조치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합의 이행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를 모니터링하고 쿠바와의 국교회복 후속 조치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오히려 핵 능력 확대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더욱 높이겠다는 계산을 한다면<sup>14)</sup>, 9월의 ‘9·9절’ 행사를 전후하여 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폭주 옵션이 현실화되면 상황은 미북 관계와 남북 관계의 동반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부 차원의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의 여지는 극도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이란 핵 타결의 교훈을 한반도에서의 긍정적인 사태진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우리의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 문제는 미북 간의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여 왔고, 모든 남북 관계에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가 담보상태에 빠진 현재의 국면에서 이 문제와 유리된 채 남북 관계만을 진전시키려 한다면 이는 자칫 우리와 워싱턴 간의 미묘한 정책적 부조화를 노출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이란 핵 협상 타결을 계기로 북한에 대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중재할 수도 있다는 입장표명을 하는 것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한,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미 더 나아가서는 북한을 제외한 5개 6자회담 참여국들 간의 공동대응 방안을 발전시키고 유관국들과 협의해 나가는 등의 조치 역시 필요하다. ©KINU 2015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4) 아니면 일정부분 성의를 보였음에 불구하고 미국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이 옵션을 실행할 수도 있다.